

북한의 변화와 통일전망

현 인 택*

I. 서 론

북한은 현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희망없는 질곡에 빠져있는 듯 하다. 식량난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이것을 마땅히 해결할 전망도 매우 희미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군부가 동요하고 있지 않고 김정일의 리더쉽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중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도 한편으로는 "구걸외교"로 일관된 식량외교에 매달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통해서 북한의 무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일종의 "위협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주변국들은 북한의 변화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고는 첫째, 북한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둘째, 북한의 위기상황의 진전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셋째, 주변국들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현상황

1. 정치적 현황

가. 김정일의 리더쉽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과연 김정일의 리더쉽이 확고한가 하는 것이다. 김일성 사후부터 이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왔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이상설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김정일이 정상적으로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군·정의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국가업무 전반에 걸쳐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군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군은 김정일의 측근들이 대거 등용되면서 김정일의 권력유지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 개방 대 보수의 갈등설

북한의 내부갈등설을 논할 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북한 내부에서의 개방파와 보수파 간의 갈등설이다. 대체로 합리주의적인 서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 북한은 개방을 통한 완벽한 체제개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소위 개방파와 개방은 곧 북한의 붕괴이며 따라서 북한의 현체제의 고수만이 북한의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보수파간에 대외정책에 관한 노선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것이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너무 도식적이며 북한의 현실을 재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의 개방·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파와 보수파 같이 거의 그 세력에 있어서 동일하고 또한 노선의 차이가 권력투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양대 세력이 존재하는 지 의문이다. 다만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각각의 부서 사이의 역할과 업무가 원활하게 조정되지 않거나 이를 수행하는 개인의 성향, 권력의 강약 등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대외적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방, 보수의 양대 세력의 권력투쟁이란 가정은 김정일에 의한 강력한 일인지배체제의 취약성을 전제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것의 개연성까지는 완전하게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러한 뚜렷한 징후를 찾기가 어렵다.

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김정일의 권력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의 지연은 김정일의 권력장악보다는 다른 문제들에 기인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통치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즉 김일성의 상징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김정일정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이 승계무드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공식승계는 그 간 권력기반 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면 대내적인 어려움,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라도 그러한 무드를 조성한 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2. 경제적 상황

가. 경제성장

북한은 지난 몇 년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어 경제침체가 구조적 단계에 들어서 있다. 95년의 경우 -4.5%의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96년도도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곡물부족현상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이 농업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냉해, 수재등으로 심각한 곡물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동안의 곡물수확현황은 필요량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의 계속된 누적으로 북한은 이제 거의 자체조달로서 이를 극복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다.

1996년의 경우도 곡물생산량은 대략 350만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평년 생산량보다 약 1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고 95년도는 이보다 더욱 작황이 나빴기 때문에 이의 누적 효과가 97년 올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연간 최저 곡물 수요량을 약 500만톤 정도 보았을 때 그보다 낮게 최저생존수준의 곡물수요량을 계상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곡물상황은 객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감안하더라도 최저 100만톤 이상의 곡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 산업현황 및 추측할수 있다.

북한의 산업현황은 현재 가동률이 30%를 밑들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은 원유와 전기를 포함한 생산원자재 부족, 수송부문의 병목현상, 인센티브의 결여 등으로 심각한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또한 1990년대에 들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1996년에 들어서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교역이 감소하였고 특히 그간 증가세를 보이던 남북한교역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투자유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침체와 곡물부족 등으로 1996년 초부터는 농업생산성 증가를 위해 7-8명으로 구성된 분조에게 일정 생산량 이상의 수확물을 자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조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 해결난망

종합적으로 북한은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이를 해결할 전망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식량의 해외의존은 심화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장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사회적 현상

가. 사회적 일탈현상

최근 북한은 눈에 띄게 사회적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적 변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요인은 첫째, 해외생활경험자, 젊은 세대, 소외계층에 의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노정되고, 둘째, 외부정보 유입의 증가로 인한 북한체제에 대한 비교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셋째, 식량 및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인구가동에 대한 목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넷째, 사회기강의 이완등으로 각종 사회비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사회적 일탈방지를 위해 학습과 조직활동의 체계적인 실시 및 사상교양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나. 정치·사회적 통제장치

북한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 통제장치의 가동에 의해 반김정일 세력이 조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소요사

태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군에 의해서 진압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가 극에 달하고 이것이 집권층 내부의 갈등과 증첩이 되면서 군부가 권력투쟁에 가담하는 사태가 오지 않는 한 완전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가 그러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4. 남북관계현황

가. 경수로사업

경수로공급협정이 1995년 12월에 이루어진 이후 후속의정서협상이 진행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6년 3월에는 KEDO와 한국전력주식회사 간에 주계약협상이 진행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되고 합의문이 채택되었고 이어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수 등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나. 남북경협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말 남북한 경제교류는 승인기준으로 3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는 2억 4천만 달러에 그쳐 전반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1996년에 들어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수함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경색과 연관이 있다 하겠다.

북한에 대한 쌀지원 문제 또한 1995년 쌀 15만톤의 무상지원등으로 남북관계의 대화조성의 물꼬가 트였으나 한국의 쌀수송선인 씨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사건과 삼선비너스호 및 선원의 억류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내 여론의 약화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97년에 들어 북한의 경제난과 특히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북한의 태도는 다소완화되고 있고 남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간의 적십자사를 통한 협상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기아문제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서 공표되고 국제적인 식량원조가 논의되고 있으나 한국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외에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문제해결이란 범주에 식량문제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다. 한반도평화체제문제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향후 한반도평화체제에 수립에 있어서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 양자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그 이후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무장지대관리 및 돌발사태방지를 위해 미·북간 군사협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북한은 1996년 2월 북·미평화협정의 중간조치로서 북·미간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협의하

기 위해 '북·미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4월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명의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한 북측 차량 및 인원의 식별표시 부착 증지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라. 남북관계전망

한·미 양국의 4자회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에 쉽게 응해 오지 않았고 그러던중에 1996년 9월 18일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의 발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것은 물론이고 그간에 실무차원에서 진행되던 경수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남북경협도 중단상태에 빠졌으며 미·북관계 또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시인·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해 핵동결과 조기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대치상태 속에서 한·미양국 정상은 1996년 11월 24일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4자회담의 중용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수용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남북간의 공식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북간의 여러차례의 접촉 결과 북한은 12월 29일 외교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잠수함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과 노력할 것을 밝혔다.

잠수함 사건이 일단락되고 1997년 상반기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 북한의 미·북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남·북대화 배제 원칙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서로 중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적 충격에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일정권의 체제능력으로는 북한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붕괴에 이르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국내 뿐 아니라 서방의 관측통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Ⅲ. 북한의 변화전망 : 향후의 가능한 시나리오

지난 몇 년동안의 남북관계 및 북한의 상황을 목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시도하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장래에 대한 매우 암울한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러한 정치체제가 탈냉전 이후 민주화, 세계화로 특징지워지는 국제체제의 성격과 부합되어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치유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점들 때문에 스스로의 개혁을 통한 정권의 연착륙이 불가능하고 결국에 가서는 붕괴에 이르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동북아 지정학의 구도를 재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네가지 다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1)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개편: (2) 현상고착: (3) 군사도발: 그리고 (4) 체제붕괴등이다.

개방과 개혁을 통한 체제개혁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단계적 변화를 거쳐 북한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개방, 개혁을 통한 현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북한체제의 무질서 상태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나 만약 북한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경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배교조적인 일당지배체제,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이행등으로의 정치변화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적어도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시행한다면 북한이 변화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북한의 다원주의적인 정체로 이행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체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인 현상고착의 시나리오는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다는 인식을 밑 바탕으로 깔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개혁, 개방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전체주의적 군사국가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전략으로 하는 국제적 문제아로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사실상 현상고착은 만약 북한이 원하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대안의 부재로 그렇게 되어갈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미 접촉에 나섰다 것은, 그것이 북한핵문제로 인해 타의적이었던 어쨌든 간에,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일 수 있고 현상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체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한 채 대미창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수혈받고자 하는데서 나온다. 물론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만을 수혈하는 파이프라인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북한체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고 국제정치의 현실로 봐서 그렇게 되기는 지극히 힘들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전적인 개혁, 개방정책의 수용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호전적인 대남정책을 포기하고 공격적인 군사정책을 변화시키면서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나서는 정도의 변화를 대가로 대외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일 체제는 그러한 정도의 변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능력이 있느냐가 지금 관찰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오히려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의 융통성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군부가 더욱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군부는 그 성격상 협상보다는 대결정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책의 변화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외골수의 대결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갈수록 북한의 지도부는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져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제위기, 극심한 식량난, 사회일탈현상의 심화로 체제의 안정성이 약해질수록 개방, 개혁정책의 여파는 클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아는 김정일정권은 쉽게 그러한 정책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점이다.

결국 어느 선택도 마땅하지 않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가지의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이것은 현상고착이 지속되면 결국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가중되어가고 정치, 사회통제 능력을 점차 잃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부 또한 높은 위기감 속에서 내부적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의 강경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붕괴로 가는 것보다는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살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실지로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이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네 번째 가능성은 북한체제붕괴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은 현재의 체제를 개혁과 개방에 의해서 변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체제로 태어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체제는 붕괴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붕괴의 유형에 대해서는 김정일정권의 붕괴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또는 국가의 붕괴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상황은 이미 이러한 정권붕괴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네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한국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인가. 물론 가능성(feasibility)을 떠나서 바람직함(desirability)의 측면만을 본다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개혁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체제야말로 최소한도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깨지는 않을 것이며 바라건대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렇게 되었을 때 남북한 양측은 평화통일에의 진지한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북한 양측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체제는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다.

IV. 주변국들의 정책

북한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는데 대해서 주변국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앞서의 네가지 시나리오가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게 이들 국가들의 인식이다.

미국은 그간 개입과 확대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 Strategy)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하는 연착륙(soft-landing)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전략의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의 한국과의 견해 차로 인하여 그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미국의 연착륙정책은 한국내의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제네바핵합의 이후 경제체제의 완화, 연락사무소의 개설 합의 등의 미·북간의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상황의 악화로 이러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동시에 정치, 경제, 외교적 관계를 맺는 등거리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고립시키거나 압박하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여파 확산,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북한에 향 후 매년 50만톤의 식량을 공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을 바라지 않고 또한 한반도에 적대적인 정부의 출현을 반대하는 정책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하에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문제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북관계의 개선의 속도와 범위는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고려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하에서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미·북관계개선이 보다 가시화되면 일·북의 접근속도는 보다 빨라지리라 예상된다. 일·북수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정치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일본이 남북한 등거리 정책이 가시화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북한의 대일청구권의 요구가 실현되면 그 장기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일청구권 예상금액은 약 50억달러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영향력의 쇠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의만회를 기본적으로 꾀하고 있다. 이는 탈냉전 후 한국 편향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추진하는 등 남북한등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핵문제가 미·북협상으로 해결되었으며 한반도평화체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등 자국이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점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러시아가 포함되는 다자방식의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V. 결 론

한반도는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의 변화는 이제 거의 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변화가 자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며 그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하게 결과하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정치현실은 냉엄하며 급격한 변화의 순간에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가 그 국가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구한말의 국제변화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현명치 못한 선택은 결국

우리가 식민통치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해방이후의 분단과 전쟁 등의 쓰라린 경험으로 이룩했다.

북한의 변황에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의 미래 100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의 결과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세운 목표와 이상의 실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통일의 달성도 우리의 전략적 주도로 인해서 얻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통일이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체제로 결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